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민생’ ‘경제’ 살리는 예산...검증 나서

제422회 제2차 정례회서
제주도·제주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건축 재정 속 예산편성
각 상임위 ‘날선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4일 개회,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7%(1465억원) 늘어난 7

조210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0.2%(28억원) 증가한 1조596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12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축 재정 속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각종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가 하면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도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부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인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섬식 정류장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 도민 대상의 공론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24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홀대’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발담과 제주해녀어업 등의 관리 보존 방안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예산이 시설비와 인건비에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 쓰일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부대의견 등이 잘 반영됐는지, 민생경제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복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4명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64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 회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면안내

3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4~5 2024년 예산안 심사각오

6~7 주요 이슈

8~9 생생 의정 활동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반등의 기회로 철저히 심의”

제422회 정례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알차고 성실하게 꾸릴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지난 9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이어지면서 공직자와 동료의원 모두가 피로감이 크다”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모두 하나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절감하기 때문”이라고 성실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히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에서도 도와 함께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국비 추가 확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내년도 예산안 도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할 것”

“해녀어업, 농업유산 등재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축하도

보를 위한 국회 예산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제주도의 잇따른 수상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해녀어업’

이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지정·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2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와 ‘2023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 포상’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제주도의 핵심 정책에 탄력이 붙어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해 도민사회 우려가 있다”며 “제주4·3평화재단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보완 역시 필요하다. 각계 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싱가포르와 교류·협력 강화

김경학 의장 등 대표단 8~11일 싱가포르 방문 경제개발청 관계자 및 코트라 무역관 면담 진행



제주와 싱가포르간 경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다져졌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양병우(더불어민주당, 대정읍)·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함께한 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9일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을 찾아 장상해 관장과의 면담을 진행, 제주 상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청취하는 한편 싱가포르 등 아세안+α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또한 제주지역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지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주 상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α 시장

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상해 관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행사 때 제주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곳이 많다”라며 “앞으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협력해 제주 특산품 수출과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근무 직원을 격려하고 제주사무소 운영상황을 청취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10일에는 EDB 싱가포르 경

제개발청을 방문해 리오넬리 본부장을 비롯한 경제개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이날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싱가포르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 해양관광 및 제조,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싱가포르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서 교육정책마련 간담회

김경학 의장, SJA방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세인트존스버리(SJA) 아카데미 제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정읍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이 함께해 학교법인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5천명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로 인해 인구 감소지역이던 대정읍에 인구가 늘어났고, 학생 1인당 소득창출 효과가 연간 4100만원, 외화절감액이 15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이스링크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에 미친 효과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웁)한 세(종)상

제주·세종·강원·전북 지방분권시대 한뜻 모았다



특별자치시·도의회간 동반 성장을 위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가 지난 1일 제주도의회 일원에서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자치체제의 문을 연 제주와 세종·강원,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인 전북이 함께해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상생 협약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협력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 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특별자치 제도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자치의 만형 지방의회로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지방차원의 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개의 특별자치시·도의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

에 맞는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특별자치 권한이양 방식 개선, 국제이양의 재정 특례 등 특별자치 제도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의장에게 듣는 토크콘서트

지방분권을 주제로 지방소멸, 균형발전, 분권모델, 권한이양 등 지방의 현안사항과 새로운 지방시대 성공의 키워드에 대해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들이 의견을 내놨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사실 특별한 권한을 가져온 것이 없다. 특별법에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고 지원인력,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다”며 “조

4개 시·도의회 동반성장 지방의회 협력방안 모색 “의회, 특별한 권한 없어 집행부 견제 권한 필요”

직권, 예산편성권이 없다. 집행부 권한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별한 각오로 지방의회 권한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선도 도시로서 세종이 갖는 의미를 우리 의원님들도 또 세종시민 한 분 한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며 “강원, 전북, 세종시의회가 연대해서 제주도의회 의장님과 제주도의회에 많은 구애를 하겠다. 힘을 모아 더 큰 상승효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큼 지방의 자치권과 재정 자주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 30년이 넘는 기간 자치분권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도 한층 성숙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권한들이 중앙정부

에 집중되어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특례 한 조항을 법에 담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설득하고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처럼 제주, 세종, 강원 그리고 전북이 힘을 하나로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분권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면 허들을 넘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대 행사도 풍성

의회 일원에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권한 이양 및 활용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보’ 전시회를 비롯해 2025년 APEC 제주 유치 및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관이 운영됐다. 4개 시도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과 퀴즈를 통해 지방 의회를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도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의원과의 소통의 장이 열려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무대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시도의 지역 문화 교류 공연이 펼쳐지는 등 박람회 행사장이 풍성하게 채워졌다.



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위기 극복 마중물 돼야”

김경학 의장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2024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냉엄하고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춰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지방세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반면에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쓸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하고 아껴야 할 곳에는 철저히 아끼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필 것입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문화예술과 제주 환경의 가치를 위한 보전을 위

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하며 협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행복과 경제활력에 집중”

김대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과도한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라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지자체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방만한 예산 편성이 나타날 경우,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도민 혈세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과 향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대응이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안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문제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을 점검하며 챙겨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세입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시설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등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 책무 다하겠다”

김황국 부의장 (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정책기획에서부터 예산안 편성까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정책 예산안을 잘 살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민선 8기 7대 도정과제인 도민정부 시대, 산업경제 혁신, 풍요로운 삶, 지역균형 성장,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목표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나가겠습니다. 제주도정이 내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얼마나 구현해 나갈 것인지 예산 편성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과제인 돌담형 제주교육, 학교체제 개편,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에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초·중·고 특화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공동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심사”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읍)

2024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7조2104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 세수결손, 경직성 경비 증가, 경기 부진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는 세수부족에 대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서민들의 궁핍과 고통, 자신감 상실은 경제활

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이 둔화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도민의 행복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도와의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심사 기간 동료 의원과 직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지 여부 살필 것”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연동읍)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으로,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점검하는 최종단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정된 재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은 7조2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정수요 대비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은 전년대비 2392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은 435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세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필요합니다.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이 적절한지, 제주도정이 말하는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약자복지, 민생경제 안정지원, 미래준비, 지역경제 견인사업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인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산의 효과성 담보 중점 검토”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가장 보편적 예산이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안전분야 예산이 두텁고 촘촘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도민건강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폐지되거나 중복지원으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지방채에 조기상환마저 중단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도민이 필요하고 유익한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 여부를 심의해 예산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만큼 기집행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출된 예산의 효과성이 담보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해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삶에 온기 전하는 심사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세수결손과 경기 부진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사는 도민의 환경 복지 향상과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공 수요 예산에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있는지, 틈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도시분야의 예산은 민생 기본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 상하수도, 교통, 도로기반시설 등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에 어긋남이 없도록, 도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심사에 들이는 노력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이끌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회복과 재도약에 중점”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내년은 그동안 침체됐던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지만 도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거꾸로 감액 편성되어 걱정이 큼니다.

특히 민선 8기 도정의 문화관광 분야 핵심사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만큼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주의 정체성 구현, 도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지장 회복과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살피겠습니다. 셋째, 제주체육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제대로운 절차 이행과 적절한 규모의 예산편성인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주의 가치 구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문화관광 예산편성인지 최우선으로 살핌으로써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꼼꼼히 최선 다할 것”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국민의힘, 표선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도 성장률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우려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은 제주의 근간인 1차 산업과 3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에너지, 지역경제 모두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분야입니다. 예산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막중한 책

임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예산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지방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사회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간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고 경기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질과 방향 결정, 신중히 심사”



김창식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교육은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며, 개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에,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사회 발전과 미래세대 희망을 위해 교육의 본질과 목표를 잃지 않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도록 편성돼야 합니다.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 교육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보다 먼저 살피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사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측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듀테크 준비를 위한 드림노트북, 태블릿컴퓨터 지원과 진로지원, 현장체험학습 확대 등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교육목적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교 안전도 점검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교육활동보호 등 학생 안전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살피겠습니다. 교육의 발전과 도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기 극복에 초점”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 한림읍)

지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업에는 성장을 지원해주고, 국내외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정에서도 다각도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07%

증가된 7조 2104억원으로 편성되고 5대 투자중점에 재원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2300억원 가량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 재원은 지방채 2400억원 차입과 2140억원의 예수금 용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SOC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등 현재 도정의 재정투자는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 공동체에 그 이익이 환원 되어야 합니다. 도정의 핵심정책과 전략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구현되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시각에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스웨덴 국회, 제주와 교류 이어 나가길 희망”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대사 방문 특별자치도 체제 등 설명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의사의 뜻을 밝혔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제주를 방문한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 에릭 오토슨 부위원장과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과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홍인숙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도 함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와 의회의 입법기구 역할, 타 시·도와는 다른 제주의 특색, 제주어 등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김경학 의장은 “방문 기간 제주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스웨덴 국회, 지방의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에릭 오토슨 부위원장도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교류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 의원 및 대사 일행은 이날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

협약식 통해 상호 연대 합의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행사에서 개최된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 협약식’에 참석,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남부권 3개 시·도의회(제주·광주·전남)는 우리 현대사에서 불법적인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제주 4·3, 광주 5·18민주화운동,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을 재조명하고, 지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명예회복과 정신계승을 비롯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지역별 국가폭력 사건의 교차 교육 및 국내외 홍보를 위해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사업 추진 내실화에 뜻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 “민주평화벨트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과거사의 재정립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숨결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교류·협력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단이 제주에서 화합을 도모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에서 교류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의회 교섭단체간 협력 방향과 지방의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의 현기종 대표의원(성산읍), 이남근 대변인(비례대표), 김황국 부의장(용담1·용담2동),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림읍),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총 3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현기종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민생 소통,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 활성화, 도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색은 지방의회의 오랜 과제였다”면서 “지방의회 서로가 지혜를 모아



2일 교류간담회 개최 교섭단체간 협력 방향 지방의회 과제 방안 논의

야 할 이 시기에 제주도와 경기도의 생산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양 교섭단체간 중장기적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도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그 어느 때보다 의회 대표기구로서 의회 내 갈등을 줄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교섭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여수시의회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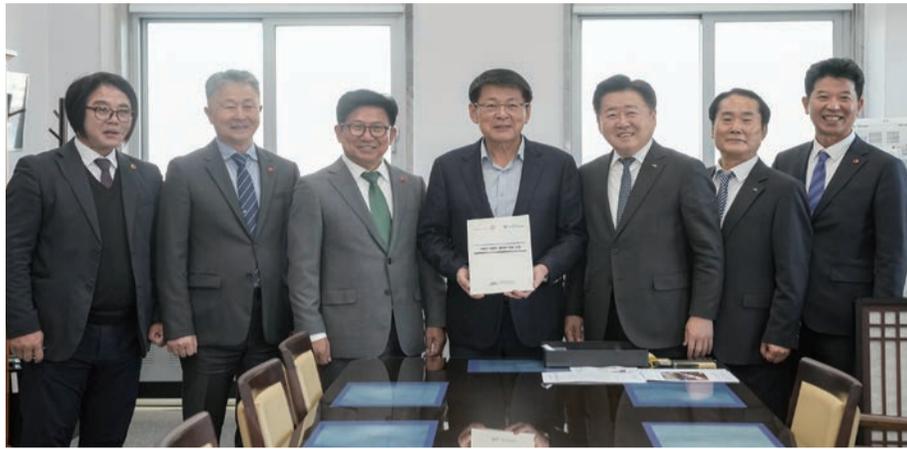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와 의회 전문성 강화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여수시가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내 응급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미 위원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국비확보단, 국회 설득 '총력전'

김경학 의장 등 20·23일
잇따라 국회 방문해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강조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두고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잇따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국회 절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 국비확보단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조용부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따라 만나며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

이날 합동 방문에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양

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 현기중 국민의힘 원내대표(성산읍) 등이 함께했다.

제주 국비확보단은 23일에도 주요 사업의 내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갖춰 국회 설득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현기중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국

민의힘 정책위의장 및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 및 증액 요청액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안정화 지원사업 10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45억 8000만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억6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5000만원 등 22개 사

업, 총 606억여 원 규모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정 핵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과 시설 폐쇄로 입소 대기 가자 늘어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건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강조하면서 “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제주가 앞서서 추진하는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농수축경제위, 현장 의정 활동 나서



이동노동자 쉼터 및
마을기업 등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달 26일 제주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쉽팡'과 마을기업인 '한라산아래첫마을'을 방문했다. '혼디쉽팡'은 고정사업장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곳으로 제주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한편 센터수탁기관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센터 관계자 등

에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면서 “혼디쉽팡이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의 복합문화 공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마을기업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사례로, 위원들은 마을에서 운영 중인 제주메밀 가공공장과 식당 및 카페를 둘러봤다. 또한 마을관계자로부터 마을기업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연호 위원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심사 대비 현장 확인

행정자치위원회, 15일
해양치유센터 부지 등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읍)는 지난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를 비롯해 강정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평동 소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예정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효돈동주민센터 등 총 4개소다.

강철남 위원장은 “서류검토와 구두보고로 생각 못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11월12일까지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뤄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루어진다.

‘재정 운용·적정성·효율성’ 우려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지난 14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선 8기 재정 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가 지난 17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선 8기 재정은 롤러코스터 예산처럼 보인다”라며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이며 재정 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금융포용지원기금과 관련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금융포용지원기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10억원 중 운영비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묵혀두고 있다. 아무런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당 시설 관련자가 경찰 수사 중인 점을 들며 “인건비 횡령 의혹이 있다.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이런데도 예산을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도내 CCTV설치와 관련해 “도내 1만7000개가 넘게 설치된 CCTV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크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지사 공약 사업인 제주가치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이 32억원으로 증가한다.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되지 않는데 과도한 지출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재정 운용 안정성 불안감 커질 것 문화예술분야 대폭 감액 ‘홀대론’ 교육청 예산안 시설비 과다 편성 논란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도·도두동)는 도정의 환경 정책 전반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겨질 것이라 우려 속에 도내 업체들의 이탈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환경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책임이다. 국민들도 함께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등의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관련 사업들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가”라며 “재정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 또한 타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년 예산안에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홀대론’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문화예술분야가 올해보다 16.3% 줄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문화예술이 홀대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과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서귀포글로벌커피스타가 내년 재개최를 예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런데도 서귀포시가 내년 행사 개최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지속 개최 여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 들불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제주시가 관련 예산에 대한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가 하면 제주비엔날레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발달과 제주해녀어업의 보존·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발달 보존·관리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발달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고 밝힌 데 이어 제주해녀어업에 관련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운영 방식과 안정성 확보에 등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데 이어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민간이 아닌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먼저 해야 할 사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더큰내일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설비에 과다하게 편성,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시설비에 들어간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이 많은 반면 학생들에게 가는 예산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태블릿 컴퓨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식 위원장은 “태블릿은 주로 회의 자료 사전 검토, 주식 자료 분석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며 “학생들이 수업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방채는 감염병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3특위 미국 방문...국제적 공감대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미국을 찾아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 미국 공식 첫 방문의 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방문에는 한권 위원장을 비롯해 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일도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위원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김종민 위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강호진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미국 출장 기간 보스턴, 워싱턴D.C, 뉴욕 등을 찾아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한편 미주동포단체 교류회 및 4·3강연도 열었다.

또한 메사추세츠 주정부를 방문해 인권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백악관과 UN본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제주4·3의 미국 책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에 나섰다. 위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4·3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4·3특별위원회 방문 결과 보고서 펴내 재미4·3유족회 간담회 및 현지 홍보 나서 “국제적 해결 첫 디딤돌 놓은 의미 커”

더불어 제주4·3평화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과 국립 9.11 메모리얼 뮤지엄 등을 찾기도 했다.

방문 결과 보고서에는 간담회 및 기관 방문 등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제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시사점이 정리됐다.

한권 위원장은 “4·3특위 출범 30주년을 시작으로 4·3의 정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의 일환으로 이번 미국 출장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현지 언론에서 직접 취재를 할 정도로 미군정 시기의 4·3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에 필요한 첫 디딤돌을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놓았다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내 4·3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권익 증진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달 31일 제주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제주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 지역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도내로 들어오는 많은 체류자격 외국인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 또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제주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연구 완료

제주도시·교통문제연구회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도시·교통문제연구회(대표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가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연구’를 완료함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책들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제주지역이 꾸준한 인구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도로와 관련된 시설비를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 환경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 DRT(수요응답형 서비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정온화기법 및 사람중심 도시 가로 등 단기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대중교통 및 보행중심 전환, 사람중심 입체화 도입 등 중기사업, 대중교통중심 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도심 내 복합개발과 같은 장기대책이 제시됐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도 도정에 적극 주문, 사람중심 교통체계를 완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령 연령 기준 세운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관련 연구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연구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맡게 됐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애 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장애인’ 재정의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설정한다. 연구 결과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유한다.

현지홍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라며 “현재 장애인 대상 고령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당사자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이번 조사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도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과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공직자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꼭 지켜야 할 내용! 이해충돌 방지 위한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직무관계자와의 거래신고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및 금지행위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기한 제주어 26

분취 대가리 웃다

(관용어) 분별능력이나 슬기, 분수 등이 없다

<예문>

“제인, 찰라 찰라 찰라(이디서 지냄시민 냉중 오켜)” “gu gu, 찰라 찰라 찰라(오래 지드리게 맏서양)” ‘구구’가 그 외국여즈신디 망을 심어줘된 야게 기 느려고부리고 호텔을 나산다. 질 예염에 인척생이 핀가지깡이고장덜이 분취 대가리 웃이 ‘구구’ 신더레 뵙삭뵙삭 웃어준다

- 지냄시민 : 지내고 있으면 · 냉중,내중,내중,나중,낭중,낭중 : 나중
- 오켜 : 오겠다 · 지드리게 : 기다리게 · 맏서 : 마세요 · ~양(첨사)
- 심어줘된 : 잡아주고 나서 · 야게기,야가기,야가지,야게,야게기 : 모가지
- 느려고부리고, 느려꼬부리고 : 내려꾸부리고 · 나산다 : 나선다 · 질 : 길
- 예염 : 가,옆 · 인척생이,일찌깡이,일찌감치,일찍생이 : 일찌거니 · 가지깡이고장 : 접시꽃 · 신더레 : ~에게 · 뵙삭뵙삭,뵙삭뵙삭,뵙삭뵙삭,뵙삭뵙삭
- 뵙삭 : 방글방글,쌩긋쌩긋

양전형 저「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양한 소식」을 만나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해 주세요!

🌐 홈페이지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소식지 신청

계간 드림제주

월동채소 수급 불안 우리가 답 찾아야



김 승 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3~2024년산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 따르면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당근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파종도 1500ha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되

며 평년에 비해 20%이상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월동채소인 월동무, 양배추도 지난해보다 면적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등 육지부의 월동채소 재배면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급에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에서 품종별 재배면적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 월동채소는 콩이나 보리 등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농가 수취단가가 높다 보니 농업인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인다.

또한 전년 유통시기 가격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하거나, 특정 품목 면적이 감소 시 다른 작목에 집중돼 매년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을 반복하

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해마다 수급불안·가격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제주지역 월동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농가들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나 ‘보리 수매가 지원사업’ 등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해 휴경을 권장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농산물수급관리 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올해산 당근과 감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농업인 스스로가 작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고품질생산 및 수급조절을 해 나가고, 의회나 행정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재배면적 증가 추세인 전남지역의 양배추 등 월동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사)제주양배추연합회, 전남 무안군 등 농협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작물의 적정물량과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월동채소가 제주의 대표적인 효자작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용을

김 동 건

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소방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매트 및 난방용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는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비상구·주출입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주출입구·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폐쇄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안전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시설 작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 등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만으로 다수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계자에게 화재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미래를 위한 정책 ‘환경교육도시’

김 형 우

제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평소 환경교육도시에 대해 아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환경교육을 위한 도시?’ ‘환경교육하는 도시?’라는 확실한 표현이 아닌 재질문의 답변을 많이 한다.

위와 같은 두 개의 대답 모두 ‘환경교육도시’ 의미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환경교육도시란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돼왔을까.

환경교육도시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등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환경부에서 지역주도 중심의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시범공모를 첫 시작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환경교육 조례 개정, 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민 누구나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올해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환경교육도시 공모사업’의 결과를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17곳 가운데 7곳이 선정됐고 7곳 안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민만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유도 환경교육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도민에서 입도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노력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제주 환경교육도시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에 맞춰 관계부서들과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환경교육도시하면 제주도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해 본다.

제주도의회 합창단 ‘첫 무대’ 선보여

13일 공감·소통의 날 통해
창단식 및 창단공연 무대
재능기부 등 사회참여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이 창
단식을 갖고, 첫 무대를 선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도민카페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의회 합창
단으로 이름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합창단의 창단식이 진행됐다.
합창단은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
원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휘자에는
양태현씨가, 반주자에는 박지영
씨가 함께하게 된다.

창단 공연에서는 ‘사랑으로’와 ‘아



침이슬’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
이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
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참여 확
대를 목적으로 출발했다. 향후 사회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봉사 활동을
계획, 음악을 통한 상생의 하모니와
화합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감·소통의날 행사에서는 제
주대학교 연극동아리 극예술연구회
도 무대에 올랐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한 공연은 직장
인의 애환이 담겨 있어 직원들의 공
감대를 이끌어냈다.

김경학 의장은 “문화공연으로 바

쁜 일상 속 마음은 비워내고, 여유
는 채우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도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방안
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다가온 만큼 추진하고 있는 업무
에 대한 마무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생 해결법...대학생 의견 공유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도의회·지방자치학회 공동

제11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제주지
방자치학회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도내 대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
던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도내 대학
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 및 정책대안 토론이 진행
됐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와 제주지방
자치학회 김성준 회장을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성준 회장은 “이번 주제는 인류

사의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기존의
사유 체계를 넘어 ‘지평 융합’의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의 공적 정
책 과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종합적이고 전체적 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은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는
제주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 현안”
이라면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과 의견은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수
행해 나가는 데 이정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은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중 주제를 선정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매년 개최
중이다.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연동119센터 공동개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
대회의실 및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동119센터와 함께 2023년 소방합
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
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
을 통해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
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 발

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 능력을 향
상시키고 신속한 인명 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훈련에서는 직원들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
폐소생술 및 옥내소화전 실습이 이
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
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 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했다.

「재정정책정보지」 제14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
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
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재
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4호(‘23,
9~10월)를 펴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과 2023년 대
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수입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분석·요약돼 실렸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 방안, 지방
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 관광지 효율
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소개하
는 한편 정책을 제언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제주도의 건전한 재
정정책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혔다.